



‘우환 폐렴 사태 이후, 3단계 경제 정상화 대책’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2020. 3. 31.

비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우환 폐렴 사태 이후, 3단계 경제 정상화 대책’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I 문제제기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경직화되고 성장동력은 사라졌다. 국제적 환경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예상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무지로 중국 편중의 외교 실수를 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무역 체제를 변화시킬 기회를 상실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과 부패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의지도 상실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는 문재인 정권 3년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급기야 국가채무 급증으로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환에서 온 코로나 19는 경제 활동을 마비시킴으로써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19가 중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까지 타격을 줌으로써 안전 자산으로 도피 행태가 가시화됐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나게 됐다. 더욱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파산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를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문재인 정권의 정치 경제적 문제

2.1. 거짓의 시작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촛불혁명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촛불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길 바라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국민

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일 행동, 건국 부정 등 일련의 정책은 과거 나찌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 전체주의자들의 정책을 연상케 한다.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차베스는 종족적 민족주의(tribal nationalism)를 강조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권력 유지에 이용했다. 유대인에 대한 악의적 평가에는 일부 지식인들이 동참했다. 스탈린도 역시 슬라브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화했다. 차베스와 쿠바는 반미 주장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여 정권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과거의 경제 발전을 부정하기 위해 한일간의 경제 협력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의 준수를 거부했다. 문재인 정권의 종족주의적 행태는 건전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권의 국민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전 국민이 동참한 인적개발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사립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모든 교육 과정에서 대한민국 교육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을 내걸고 사립학교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전체주의적 교육관을 드러냈다. 히틀러가 교육을 장악하려는 행동을 연상하게 한다. 사학의 역할이 폄훼되고 사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트리고 있다.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서도 입증됐다.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과 여권 지지체장들은 서슴치 않고 자기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는다. 더욱이 헌법에서 금지한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도 서슴치 않는다.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결정한다.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차베스가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를 지우고 사회주의의 허상을 불러내려는 듯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립학교와 민간 기업의 힘으로 어느 나라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문맹자들이 사라졌다. 사립학교에서 인재를 배출되고 기업들은 성장했다.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원전으로 전국에 전기가 없는 마을이 없고, 서울 사람이나 땅끝마을이나 비슷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휴대전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없고, 정보화의 격차도 줄었다. 소득분배 상황도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우수한 편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제발전사를 폄훼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인물들을 물러내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분을 넓혀도 현실은 내정했다.

문재인 정권의 허황된 정책 실험은 실패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자 막대한 예산으로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의 가동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들은 더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독재자들의 말로는 처참했다. 촛불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도록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다. 무엇이 거짓인가. 국민과 함께 밝혀 나가자.

2.2.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정권의 거짓말

2017년 5월 21일 장하성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책임자인 정책실장으로 등장했다. 강남에 사는 장하성 교수는 재벌개혁과 불평등 개선을 주장해 왔다. 그가 불평등 주장하면서 인용한 통계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았다. 기업 이윤과 피용자 보수를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주장을 했다. 기업의 이윤 비중은 증가하는 데 피용자 보수의 비중은 감소한다는 통계는 추세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 이윤이 늘어나야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대립 관계가 없다. 기업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기업의 이윤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다시 투자된다. 정책 책임자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틀렸고 실증적으로도 입증되지 못했다. 만약 장하성 교수가 피용자 보수와 기업 이윤을 노동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논리를 전개했다면 마르크스의 주장과 유사하다. 이미 폐기된 19세기 이론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다.

2017년 7월 25일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책 목표를 내걸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발표됐다. ‘사람 중심 경제’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경제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중복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이른바 노동과 자본을 대립적 관계로 해석하고 노동 우선의 경제 운영을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람 중심 철학은 북한의 주체사상인 만큼 북한과의 연계성을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분명한 설명이 없기에 명확하지는 않다.

소득주도성장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성장은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복이다. 문재인 정권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정책이다. 경제 활동의 결과로 인한 소득은 모두 가계에 배분된다.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엉터리 논리임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감세가 아니

라 증세를 했다. 논리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가계소득을 올리지 못한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총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명성까지 훼손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2018년 8월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자 회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았고 국민은 실망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은 반성이 없었다. 부작용을 감추어 국민을 속이기 위해 고용안정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의 재정을 지출했다.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경기지수 동행지수는 2013년 3월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변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은 개선된다. 한 문장에서 모순된 주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권이다. 더욱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는 주장을 통해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근로자소득과 가계소득을 구별하지 못한 주장이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했는가.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데로 최저임금을 급등시킴으로써 정권의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의도가 읽힌다.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청년 및 저숙련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정책의 실패가 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재정 지출로 부작용을 막으려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노출했다. 차베스가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고 국민을 보조금에 의지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헤어날 수 없는 그물 속에 가두었다. 사회주의적 전체국가가 실시하는 통제정책의 민낯은 언제나 부끄러운 부패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도 이러한 일반적 사례와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다.

2.3.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진 경제정책의 허상

문재인 정권은 경제정책도 정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엄밀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마련돼야 하지만 규제와 통제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했다. 반재벌 프레임은 좋은 정치적 소재다. 히틀러는 대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압박한다. 대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대기업을 죽이는 것보다 통제를 선택하게 된다. 스탈린은 대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지배전략을 사용했고, 차베스는 석유 회사를 국유화했다. 물론 정권에 의해 지배된 회사들은 부패하고 정권의 자금줄로 전략했다.

기업인들의 일탈 행위는 사회적 비난 대상이다.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를 했다고 그 사람의 경영권을 뺏을 수는 없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전체주의자들은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비난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다는 공포는 전체주의적 통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치적 선동에 성공할 수 있다면 위헌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경영권 개입은 정부의 기업 경영을 배제한 헌법 126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치적으로 유리해도 정권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경제 발전의 기본적 조건이다. 탈원전을 통해 일부 적극적 지지자들을 포섭하고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조를 장악하거나 노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 기법이다. 히틀러는 이를 위해서 독일노동전선(German Labor Front)을 만들어 노조를 규합했다. 다양성이 부정되고 획일적 노조 운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었다. 근로자들은 노조의 정치화로 피해를 보더라도 전체주의자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정치 전면에 내세운다. 전체주의자들의 수법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운동의 일탈 행위를 방조하고, 경영 차원의 방어 행위를 처벌한다. 이로 인해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위협당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언론이 노조에 의해 장악되면서 시청자와 독자가 떠난다. 경영 악화 등의 부작용은 바로 기업 종사자들이 입게 된다. 기업이 무너지는데 경제가 잘될 수는 없다.

복지는 전체주의자들이 내놓는 당근이다. ‘국가가 삶을 책임 진다.’는 주장은 북한을 비롯한 많은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들이 내뱉을 만한 말이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말이다. 나치(NAZI) 독일에서 히틀러는 민간 자선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를 주창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히틀러가 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유대주의나 공포정치뿐만 아니라 관대한 복지지출이 역할을 했다. 독재자들은 국민의 돈이지만 자기 돈처럼 쓰면서 국민의 환심을 산다. 문재인 정권의 현금성 복지지출과 관대한 복지제도는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 지출은 우려를 넘어 공포를 준다.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어도 빚을 내어 현금성 복지지출을 한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기반은 약화하고 국민의 경제하려는 의지만 사라진다. 그 많은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액수의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정책이란 포장으로 편향적 이념을 위한 정치 작업을 했다는 의심마저 든다.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좌익적 사고이거나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정책이 실패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과연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권의 권력 강화가 목적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제는 나빠지고 있고,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지우고 건국과정과 이후 경제 건설 과정을 왜곡했다.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일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칭송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낸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미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파괴하고 있다. 투자는 감소하고 혁신적 투자는 막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마구잡이식으로 낭비한 지출로 재정이 파괴되고 이에 따라 미래의 경제도 어두워지고 있다. 향후 젊은이들은 빚더미에 나 앉게 됐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낸 경제 허상은 이제 그 추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2.4. 자유를 기반한 정책의 필요성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민간의 창의력을 억제한 채 경제를 파괴했다. 재정을 낭비하고 빚더미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도 허물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등 사회주의자들은 적을 만들어 처벌하고, 경제를 통제했다. 이들은 노동자 중심의 경제를 약속했지만 결국 국가를 파멸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말해도 이제 국민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의심한다. 사람 중심 경제가 무슨 경제이며, 촛불혁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문재인 정권이 답을 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경제정책,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 기술 혁신을 위한 혁신 시스템 개혁 방안 등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만이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

III 전환 대상 정책

3.1. 최저임금제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특수한 상황일 때에만 가능하다.

노동시장에서 사용자가 극히 소수이고 고용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인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일 때에만 최저임금제로 고용계약에 개입하여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는 이러한 판단 조항이 없다.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근로의 권리를 침해되고 소득을 상실하였다. 더욱이 영향률이 25%나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 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표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항목	2017년	2018년	비고
취업자 연간 증감	31.6만명	9.7만명	2018년 남성 취업자 증가 수는 0.4만 명에 불과
실업자 연간 증감	1.4만명	5.0만명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자 급증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8시간	41.5시간	단기간 취업자 증가로 근로 시간 감소.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	21,930천명	21,209천명	정규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
전국가구 1분위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4 사분기 비교)	895.4 천원	823.4천 원	2018년4사분기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8.1% 감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법에 기술된 목적과는 달리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실업에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희박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실업자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취업이 가능했던 일자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최선의 일자리가 아니라 차선의 일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이론적 논의에서 이야기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산업별 취업자 이동이 통계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커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임금 수준보다도 생산성이 낮은 비숙련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들의 선택은 근로시간을 줄여 단기 일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잠재적 실업상태와 마찬가지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된다. 예컨대 농림어업분야에서 가족의 농사 등을 돌봐주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서 일거리를 찾거나 자영업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높은 인건비로 폐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등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의 소질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 (단위: 천명)

	전 체 취 업 자	농 림 어 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2015	281	-109	147	146	243	25	59	11	147
2016	231	-65	-15	-21	312	15	33	9	254
2017	316	6	-14	-18	323	119	38	-35	202
2018	97	62	-60	-56	96	47	-117	101	66
2019	301	55	-85	-81	331	-15	1	6	339

2018년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6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11만 7천명이 감소하여 비숙련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제32조는 고용증진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에서도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25%나 되도록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량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조치이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이의제기 등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은 일방적이어서 입법 재량을 벗어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이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의제기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두는 등 최저임금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법률에 의해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입법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하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3.2. 주 52시간 근로제

<표 3>은 각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간 근로시간으로 바꾼 수치를 제시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보다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연간 근로시간으로는 파악할 수 없던 사실이 일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표 3> 대리인이 제시한 평균 근로시간

	연간 노동시간 ¹	주당 근로시간 ²	일 근로시간 ³
한국	1967	35	6.9
일본	1706	30	6.0
독일	1305	23	4.6
영국	1513	27	5.3
미국	1792	31	6.3
OECD평균	1673	29	5.9

주 1: 대리인 제시 근로시간 (대리인은 ‘근로’ 대신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

2: 57주로 나눈 시간

3: 주 5일로 나눈 시간

우리나라의 일 근로시간은 6.9시간으로 정규직의 일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평균 근로시간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단기 시간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의 문제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이 더 문제이지만 주52시간제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장시간 근로가 높은 자살률, 그리고 국민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주장의 근거는 희박하다. 근로시간보다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해서 일자리가 없거나 임금 상승으로 경영이 곤란해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문제가 생긴 경우가 더 사회적 문제를 만든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 2018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단위: %)

	시간제	자영업자
한국	12.2	25.1
일본	28.9	10.3
독일	22	9.9
영국	23.2	15.1
미국		6.3
OECD평균	16.5	14.7 (E U)

자료: OECD (2020), Part-time 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f2ad596c-en (Accessed on 06 March 2020)

<표 4>는 우리나라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과 영국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매우 높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자영업자들의 장기간 근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제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려 국민 행복을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 주52시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전문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됩니다. 대리인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존엄성 기준이 시대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측면을 인정할 때, 동시대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존엄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52시간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2017년 전일제 종사자 주당 근로시간 설문조사

분류	세분류	사 례 수 (명)	4 0 시 간 미만 (%)	4 0 ~ 4 4 시간 (%)	4 5 ~ 4 9 시간 (%)	5 0 시 간 이상 (%)
종사 상지 위별	임금근로자(피고용자)	97	17.4	31.2	19.1	32.4
	그외종사자	32,779	4.5	59	16.5	19.9
직 업 별	관리자	228	0.7	72.7	17.2	9.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962	4.6	69.7	14.4	11.3
	사무종사자	8,876	1.2	77.3	14.8	6.7
	서비스종사자	2,487	9.1	36.7	15.9	38.3
	판매종사자	3,133	4.7	40.5	18.7	36.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4	15.5	38.5	17.7	28.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147	4.1	44	21.4	30.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840	2.5	51.8	19.8	26
	단순노무종사자	2,960	13.7	38.1	16.4	31.8
	군인	119	1.7	72.6	13.8	11.9

주: ○ 통계표명 근로시간 형태 및 주당 근로시간(피고용자)
 ○ 조회기간 [3년] 2017~2017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표 5>에서 제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현재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종사자의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32.4%, 그 외 종사자는 19.9%로서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주52시간 근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근로자와 사용자가 존엄성을 상실하면서 근로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피용자가 경제적 약자라고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를 포함해서 피용자가 아닌 종사자들의 근로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약 20%의 종사자가 주5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시간으로 평가했을 때, 주52시간의 근로가 인간 존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계약자유의 권리를 부정하고 주52시간제를 강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피용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정책으로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주52시간제를 강제할 경우에 사용자보다는 근로자가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정부가 동 법률에 의해 권리 침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주52시간제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에 피해를 주는 입법임을 알 수 있다.

주52시간은 우리나라 근로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계약자유의 기본권을 박탈하여 사용자보다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줌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법적 취지마저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로제도 수정돼야 한다.

3.3. 기업경영의 통제 법률 폐기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법률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기금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다. 헌법 126조에 의해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의결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행했다. 이른바 shadow voting을 원칙으로 행동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돈으로 경영권에 개입하여 특정 CEO를 선임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헌법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경영 간섭은 정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불합리한 규제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합리적 경영이 어렵고, 탈원전 이념을 위해 불합리한 경영으로 월성 1호기 등의 정지 등 원전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상생협력법에서는 상생이 없고,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이 없는 듯한 행위들이 있다. 심지어 사적 미디어들의 개별적 보도 등의 공정성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의 공정성을 들먹이는 터무니없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하는 채널은 공정하고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채널은 불공정한 것처럼 감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무슨 벤처 육성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부처가 소위 힘을 얻기 위해 국민을 통제하는 처벌 조항과 다른 부처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적합업종 제도가 경제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고 만들어졌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운영은 그 자체가 문제다.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의 사업을 규제하는 법에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문제다. 대기업의 사업을 규제하

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중소기업 대표 등 대부분 이익집단의 대표와 친정부 공익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정한 회의 진행이 기대되지 않는다. 더욱이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위원회 위원 구성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해도 되는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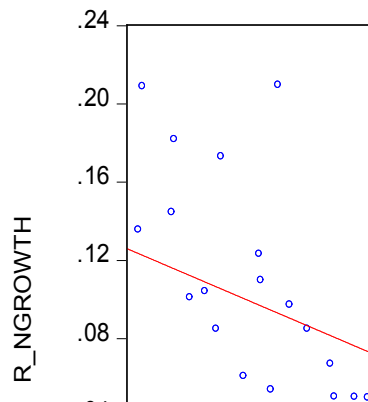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내 직간접적 경영 통제권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묻고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적자금이 투자된 은행의 경영권을 놓고 금융감독원은 처벌하고 금융위원회는 통지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선임을 반대하고, 공적자금이 가진 의결권으로 찬성하는 등 난맥상이 노정됐다. 정부 안에서도 저마다의 경영권 개입 권한을 가지고 서로 투쟁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는가.

IV 문재인 정권의 국가재정 실정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분의 48.8%를 국세로 더 거둬들여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의 비율은 15.5%로 역시 역대 최고다.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국민소득 58조 원 중 28조 원을 국세로 더 걷어 갔고, 여기에 3.5조 원 건강보험료 증액으로 더 가지고 갔다.

2018년의 가림주구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로 떨어지고, 국세수입증가율도 0.4%로 떨어지는 등 경제 참사가 벌어졌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총국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2017년 경제성장률 3.2%에서 떨어졌고,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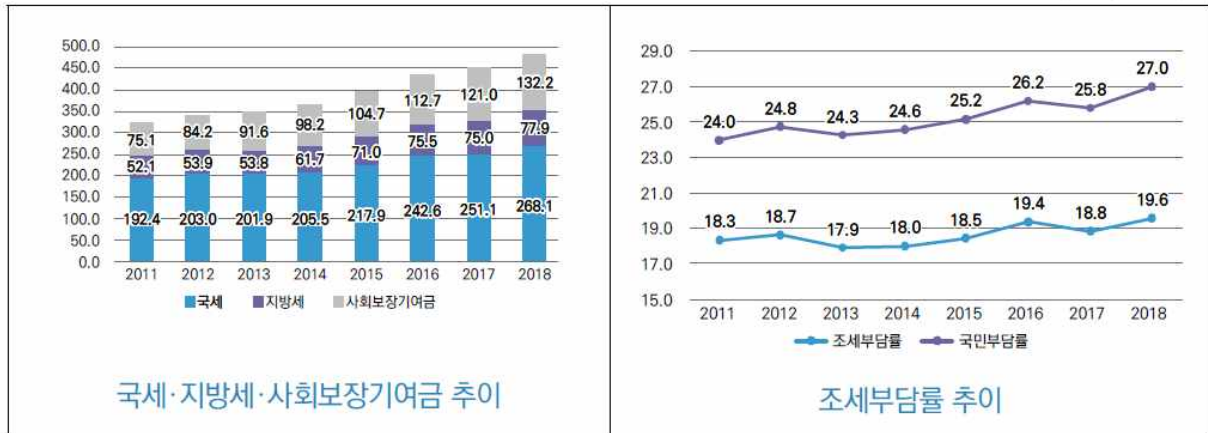
<표 6> 조세와 경제성장



주: R_NGROWTH는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 R_TAXTOINCOME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총국세의 비율임.

〈참고 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조원, %)



문재인 정권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가장 낮은 정권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을 주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정부 총지출 증가분 대비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액의 비율)로 평가했을 때, 문 정권은 가장 낮은 지표를 보였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효과가 없는 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전혀 없어 저소득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도 감소하여 도탄에 빠지고 있다.

〈표 7〉 정부 총지출 증가분 대비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액의 비율

(단위: 조 원, 비율)

연도	명목 GDP 증가액 (A)	정부의 총지출 증가액 (B)	B/A	평균
2008	64.6	20.1	3.2	이명박 정부 평균
2009	51.1	27.3	1.9	
2010	117.3	8.3	14.1	5.5
2011	66.3	16.3	4.1	
2012	51.2	16.3	3.1	박근혜 정부
2013	60.7	16.6	3.7	
2014	62.1	13.8	4.5	5.5
2015	95.1	19.6	4.9	
2016	82.8	11	7.5	문재인 정부
2017	94.9	14.1	6.7	
2018	57.8	28.3	2.0	(2018-19)
2019 잠정	59.6	40.8	1.5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수십 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사용했으나, 일자리 상황은 참사 수준이다. 2019년에는 국민이 더 번 금액인 약 60조 원 중에서 정부가

41조 원을 사용하고 경제는 파탄 났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파탄을 낸 정권됐다. 2017년 4월 말 문 정권 출범 직전 국가채무 621.3조 원에서 2019년 11월 말 현재 704.5조 원으로 약 31개월간 매월 2.7조 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2023년에는 1061.3조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채무는 향후에도 현재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동결해도 갚을 수 없고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세대도 감당하기 어렵고 재정 파탄으로 모든 국가재산을 매각하고 국민이 굶주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매년 33만명씩 급감하고 전체 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 재정 지출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고 재정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다.

200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국세 증가액은 11조 원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지급하는 이자 금액은 2019년 16조 원에서 2020년 18조 원, 그리고 2023년까지 2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향후 이자를 뺀 나머지 모든 지출을 동결해도 국세 수입 증가액으로 이자도 못 갚게 되어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9년 9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2.3조 원에서 2023년 90.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예측치보다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9년 731.5조 원에서 2023년 1061.3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다.

국민연금재정이 악화되고,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가 파산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V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 3단계 대책

5.1. 코로나 19의 교훈

중국 우환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 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경제활동

에 지장을 주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지역으로 코로나 19가 유입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유럽으로 확산한 바이러스는 미국으로 침투하면서 미국에서도 코로나 19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각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실물 경제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이 충격이 금융 분야 등으로 다시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사슬이 지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기 시 공급사슬이 완전히 끊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체제는 그동안 자산 특수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회사의 관계로 해결했으나, 이번 사태로 자회사 관계 및 특수관계의 경우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혁신을 위해서도 글로벌 선도기업은 2개 이상의 공급사슬을 갖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 관리가 글로벌 위험을 완충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 향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외환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의 강건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진출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위기 시 국내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로부터 탈출하려는 세력과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세력이 균형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경제가 불안해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감당해야 하는 충격은 매우 크다.

셋째, 우리나라는 아직 대형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는 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출입 시 건강 상태의 점검뿐만 아니라 출국 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국 시 증상이 나타나면, 체류 시간 동안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적해 점검해야 한다. 추적 시스템도 허술하다.

신천지 사태도 춘절로 감염 시기가 당겨지고 있어 춘절 시에 입국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증상 없이 입국했다가 입국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출국 시에 아무런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해도 추적할 수 없다. 지역 사회 감염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지자체마다 코로나 정치에 매몰되어 사태가 지난 이후 이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면 두고두고 얼굴을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 봉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다. 결국 전염병 발생 시 기본이 되는 유입 차단과 확산 봉쇄가 모두 실패한 모양이다. 이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시키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대만과 미국 등 초기에 중국의 입국을 제한했던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충격이 덜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입국 제한을 늦게 함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같이 감염병 대응에서 초기 대처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태를 극복하고 예전과 같이 돌아가면 다시 유사한 충격이 발

생활 때 그 비용은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5.2. 맞춤형 3단계 정책

현재 전염병이 창궐하여 경제 활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 대책은 무용하다. 원인은 전염병인데 상품권을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포탄이 주변에 떨어지는 데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실시 한다면 다들 웃을 것이다. 돈을 나누어준다니 다들 싫지 않은 모양이다. 경기도 부천시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급 제외한다니 반대를 멈췄다. 대구시에서는 왜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외치는 시의원이 있을 정도다. 전혀 효과가 없지만 총선 전에 돈을 준다니 분위기가 좋은 모양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총체적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재정지출이 집중돼야 한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대책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에 위생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지금은 알코올도 구입하기가 어렵다. 체온계도 구입하기 어렵다. 마스크도 강제 배분하고 있다.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용지물이다.

다만 경제활동이 정지되면서 영업이 정지된 부분에서는 경제 활동이 진행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유동성이 필요하다. 유동성의 제공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급한 정책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은행이 선언한 RP 매입, 프라이머리 딜러의 포지션 확대 등은 유동성이 자영업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국채발행에 따라 민간의 국채 수용이 어려워지자 나온 대책에 불과하다. 국채와 은행권으로 구성된 틀 안에 자금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문제에서도 잘 못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마다 선심성 지출을 하고, 정작 해야 할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대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의 정상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정지된 민간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로제, 각종 규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 지금이 위기니 이러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당들은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굿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말이다. 굿으로 해결이 안 돼도 정성이 부족해서 안된 것으로 말하면 그뿐이다.

이 단계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은 민간주도의 경제 활력을 복돋는 방안이 돼야 한다.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 2019년에 통계로 보았듯이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 지출을 구축하고 경제는 저성장으로 문힌다. 물론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경제위기를 잉태하고 수년이 지나선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조정이다. 글로벌 공급 사슬의 재편과정과 그동안 지속한 경기침체로 도저히 회생이 어려운 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경쟁력도 확인이 되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하면 나온다. 구조조정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어 경제 정책을 시간의 흐름과 사태의 진전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무작정 경기 살리기에 들어간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때를 맞추어 해당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5.3. 경제 위기 극복 대책

문재인 정권이 잉태한 경제 위기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화였다. 김대중 정권 이후 노동의 권력화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서 경제 활력은 떨어졌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결정도 노동 권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인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과격한 노동운동에 따른 기업들의 경쟁력하락에 기인한다. 2008년의 위기는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로 대처를 했으나,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두고 경기 대응을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부실한 집행과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켰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향후 고령사회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결국 10년 내 위기 발생가능성도 더 커졌다. 더욱이 2020년 국채 물량의 급증으로 채권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경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국가채무 및 각종 규제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세계적 우환페렴 문제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대책은 지속가능성을 잃어 버린다. 경제의 대책은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국가채무 관리 강화와 민간주도의 경제활동 부양이 돼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3김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3김 시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능력도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불만을 정치세력화하여 집권한 시대이기도 하다. 외환위기와 그 극복 과정에서 3김의 능력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3김의 후예들이 다시 우리 정치 권력의 수장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위기로 빠지고 있다. 정치 세력이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 문제는 더 악화한다. 정치가 경제를 놔주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충분히 보여줬다. 우환페렴 사태는 경제를 주저앉힐 수 있는 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댄질하다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능력도 상실했다. 3단계 정책 방안도 노동시장의 개혁을 놓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잠재력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재정위기, 연금고갈 방치, 경제의 정치화, 교육 경쟁력 상실, 혁신 능력 고갈 등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다. 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